

정당성을 잃은 박근혜

더 큰 촛불과 노동자 투쟁으로 몰아 붙이자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던 박근혜의 위기는 집권 반 년이 지난 지금, 해소되건커녕 ‘국정원 게이트’ 속에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정원 게이트는 지난 대선 때 강력한 결집을 이뤘던 우파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무리수를 뒀는지 보여 준다.

이제 마무리된 국정조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용판, 원세훈과 비호 세력은 국정조사를 ‘진실 암매장 조사’로 만들어 버렸다. 저들은 온갖 막말로 국정조사장을 ‘일베 게시판 생중계장’으로 만들었다.

국정조사의 유일한 성과는 권은희 수사과장 같은 정의·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촛불이 더 커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데 있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자들의 온갖 “거짓말”을 용기있게 고발했다.

그리고 오히려 국정조사장 밖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것은 촛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껌대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싶었던 자들의 의도는 먹히지 않고 있다.

특하면 ‘대선불복하는 거냐’라는 저들의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해지고 있다.

세제개악안 발표와 번복이 있었던 지난 2주간에는 갤럽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지지도가 10퍼센트나 추락하기도 했다.

근래 박근혜 정권이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 유리지갑 터는 세제개악안을 ‘원점 재검토’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소위 ‘원칙’을 훼손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철도에서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낙하산 사장을 밀어붙이려는 시도가 일단 멈춘 상태다.

‘불법과 비정상’

이처럼 박근혜는 촛불이 다른 문제와 결합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물타기와 꼬리 자르기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술수를 지속하고 있다. 전두환 뒤지기, 4대강 털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우파가 뚝뚝뚝치고 국정원이 멧글까지 달면서 박근혜를 밀어 준 이유는 노동자·민중을 쥐어짜면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는 데 있었다.

이 때문에 박근혜는 경제민주화 용도폐기, 복지 확대 포기, 재벌 퍼주기와 노동자 쥐어짜기를 향한 질주를 강화하려 한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원내 복귀를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온갖 정책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하려면 민주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작은 떡고물이라도 주면 언제든 국회로 복귀하려는 민주당이 한심하고 믿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는 갈수록 주먹을 앞세우려 할 것이다. 정당성이 사라질수록 ‘동의와 설득’보다 ‘강제와 폭력’에 의존하는 법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8월 15일 집권 후 최초로 시위대에게 ‘광복절 기념 물대포’를 쏘고 3백여 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의 정당성은 뿌리깊게 흔들리고 있다.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나라”를 말했을 때 여기저기

서 비웃음이 들리는 듯 했다. 국정원 게이트야말로 ‘불법과 비정상’의 종합 아닌가.

박근혜는 이런 정당성 위기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성난 민심’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한다. 따라서 시국회의 내의 NGO 지도자 등은 이런 방향으로 운동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더는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이 운동을 특검 등 제도적 절차에 종속시키며 민주당 꿈무늬 쫓기에 머무르도록 통제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계속 더 크게 타올라야 한다. 노동운동도 이 과정에 더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는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며 민주주의도 노동계급이 앞장서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보여 줬듯이, 촛불 속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행동하자. 무엇보다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이용해 곳곳에서 투쟁과 파업을 일으키며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전선을 확대·강화해 나가자.

모입시다! 국정원 정치공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집중 촛불대회

일시 : 8월 31일(토) 저녁 7시

장소 : 미정

주최 : 시국회의

KTX—철도 민영화 저지 2차 범국민대회

일시: 8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역
주최: KTX민영화저지범국민 /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승리 금속 결의대회

일시: 8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
주최: 금속노조

쌍용차 해고자 복직·비정규직 정규직화·국정조사 실시 범국민대회

일시: 8월 24일(토) 오후 4시
장소: 서울역
주최: 8·24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

2008년 촛불항쟁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쟁점 확대와 노동자 투쟁 결합이 필요하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촛불운동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복지 먹튀, 연이은 부패 비리로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쌓여가던 참에 국정원 게이트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됐다. 취임 반 년도 안 돼 수만 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도심에서 매주 열리게 된 것이다.

이런 양상 때문에 지금의 촛불운동은 여러모로 2008년 촛불항쟁(이하 ‘촛불항쟁’)을 떠올리게 한다. 촛불항쟁 역시 당선 직후부터 민영화, 경쟁 교육 등 온갖 반동적 개악을 밀어붙이던 이명박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폭발이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의 촛불이 2008년 때처럼 폭발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 장악을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물론 주류 언론은 철저히 이 쟁점을 은폐·축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집회가 계속 커져 온 것은 저들의 술수에도 결국 진실이 파져 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일각에서는 광우병은 접근하기 쉬운 ‘먹을거리’ 문제였지만 국정원 게이트는 민주주의 쟁점이라 거리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은 촛불항쟁의 방아쇠 구실을 했을 뿐이다. 촛불은 반이명박 쟁점을 하나로 모으는 구



촛불 속에서 큰 호응을 받아 온 철도 민영화 반대 주장.

심이 됐다. 그래서 청소년, 비정규직 청년들, 대학생들, 노동자들까지 폭넓게 운동에 참가했고 운동 초기부터 이명박 퇴진과 탄핵 구호가 터져 나왔다.

지금의 촛불운동도 더 한층 성장하려면 쟁점 확대를 통해 박근혜에 맞선 다양한 불만이 거리로 나오도록 조직해야 한다. 실제로 철도, 쌍용차, 언론,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발언은 촛불집회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국정원 정치공작 시국회의의 주요 세력들은 이런 과제에 소극적이다. 이들은 국정조사로 초점을 맞추며 운동의 요구를 제한하려 하기도 했다.

주요 사회 운동 단체들이 뒤늦게 운동

에 참가해서 운동 참가자들의 뒤를 쫓기 급급했던 2008년과는 다르다. 당시 거리를 압도한 것은 대중의 자발성이었다.

연이은 우파 정권의 집권과 2008년 후반 이래 깊어지는 세계경제 위기는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실종된 고리

촛불항쟁의 경험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촛불항쟁은 이명박 정권과 그가 추진하려던 정책들에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건 개혁주의자들은 ‘거리 시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정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과의 동맹을 통한 의회 정치

로 나아갔다. 이들은 지금도 촛불집회를 국정조사의 보조물로 여기며 민주당과의 공조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2008년 촛불항쟁의 진정한 교훈을 이끌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촛불은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가 분출하며 아래로부터 자발성과 투지가 만개할 때 놀라운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서 실종된 핵심 고리는 노동자 투쟁이었다. 거리의 촛불시위와 “국가 공간 산업을 모두 틀어쥔 저력 있는 집단”인 조직노동자들의 파업이 결합했다면 그 효과는 엄청났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러지 못했다.

이 점에서 철도노조가 적극적으로 이번 촛불운동에 참가해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인상적이다. 서서히 불붙는 노동자 투쟁이 국정원 게이트 촛불과 결합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릴 것이다.

또한 2008년 촛불항쟁은 대중 투쟁에 함께하고 배우려하면서도 이런 과제를 일관되게 추구할 변혁 정치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반민주·반노동의 뿌리인 박근혜 정부에 강력하게 맞서려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지금의 촛불운동에 적용하려고 해야 한다.

특검이 효과적 대안일 수 있을까

알맹이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 차례 시행된 특검에서 속 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밝혀낸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중의 실망과 냉소만 일으키며 진실을 덮는 또 다른 국면이 되곤 했다.

근래 이명박 BBK 특검, 디도스 특검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일부 시국회의 지도자들이 ‘독립적 특검’의 좋은 사례로 언급하는 내국동 특검도 이명박을 심판대에 세우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특검의 이런 한계는 사실 당연한 것이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의혹의 몸통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몸통을 파헤치길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에선 워터게이트로 중도 퇴진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사례를 들어 특검의 유

용성을 말한다.

그러나 닉슨을 궁지로 몬 도청 사건은 폐 공작의 실체는 특검이 밝혀낸 것이 아니다. FBI 간부와 백악관 참모 중 일부가 내부고발자로 나선 덕이었다. 당시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전 반대운동 등 대중투쟁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지며 지배자들

이 분열했던 것이다.

결국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는 특검 같은 제도에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특검도 수용할 뜻이 없어보이지만, 수용하더라도 물타기와 방해 공작을 통해 꺾이기로 만들려 할 게 뻔하다. 그러면서 대중의 분노와 관심이 가라앉길 기다릴 것이다. 국

정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언론노조 KBS지부 위원장은 “촛불의 힘이 [내부에서 보도 통제와 싸우도록] 언론인들을 각성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진정한 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준다.



《레프트21》 109호 주요기사

철도 민영화 강행 추진과 저지 투쟁
이집트 혁명 민중의 성장과 조직의 필요

후쿠시마와 세슘 생선 달하지 않은 지옥문
다시 듣는 맑시즘2013 아나키즘과 자율주의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실과 정의, 민중의 삶이 삭제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2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집회를 보도조차 안 했습니다. '장마철에 걸레를 삶아서 써야 한다'는 뉴스를 메인으로 내보냅니다.

가식적 중립을 거부하고 노동자와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선 〈레프트21〉은 우리 사회 99퍼센트의 눈과 귀와 입이 되고자 합니다.

박근혜 시대,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 좌파 언론 〈레프트21〉은 민주주의와 진보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이라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http://www.left21.com>

현대차 정규직·비정규직의 투쟁과 연대